

방탄헬멧·보호장구류 납품 등 전력지원체계 통제 강화

# 軍, 거꾸로 가는 ‘국방전력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

군·방사청 등 군수품 규정 제공  
美·유럽 군수품, 민간업체 주도  
민수 판매로 관련시장 활기·성장  
軍, 대다수 국·내외 기관에 위탁  
특허·실용신안 등 국가소유 원칙  
디자인 등 타 업체와 공유하기도



방탄헬멧을 비롯한 보호장구류, 전투피복을 비롯한 전술장비, 총기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장비 등 전력지원체계의 선두적 위치에 서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군과 관보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미국의 ‘크라이 프리시전’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멀티캠’ 위장패턴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장비와 보호장구류를 개발해 왔다. 미 육군 나틱연구소보다 관련분야의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펠터와 에임포인트 등은 각각 미군이 사용하는 청력보호용 헤드셋과 총기 조준경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독자적으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연구실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험평가 등은 국·내외 공인인증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 기관이 해외 선진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전력지원체계 지원위해선 근본적 시장 활성화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및 품질검증 등 전반을 업체가 주도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관련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살상 및

국가적 전략물자가 아닌 이상 민수용 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즉 관련 시장의 활기가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개정된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훈령 제136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만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연구개발 했음에도 디자인과 설계 등을 타업체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성전투화 등은 트렉스타사가 개발했지만, 복수의 업체가 트렉스타사가 개발한 형상을 똑같이 적용해 납품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관주도의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불만 사례로는 흑표전차와 K2C1 총기사업이다. 이러한 선례가 전력지원체계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흑표전차의 터키 수출의 경우 생산업체인 로템은 수출실패의 위험성을 짚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라는 꼴물을 챙겼다. K2C1은 S&T 모티브가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사업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도 함께했기 때문에, 생산업체에게 주도권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관 주도’라는 구세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전부개정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산업부, 기업들과 탄소중립 대응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에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E1,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DL에너지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맞손

산업부, 요즈마 그룹과 업무협약  
성장동력 발굴·수출 지원 돕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 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양 기관이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조 역량이 우수한 한국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약속했다.

향후 요즈마그룹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견기업 관심분야의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KAIS

T·와이즈만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수 중견기업인이 출자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중견기업벤처캐피탈 ATU파트너스가 공동 운영하는 ‘한-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 결성식도 진행됐다.

이러진 세미나에서는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가 ‘한-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요즈마그룹이 추진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신규펀드 결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이스라엘 기술협력거점의 필요성’을 주제로 양국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국내 중견기업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靑, 대한상의 등 경제계 소통 순차진행”

“한국판 뉴딜, 규제완화 등 논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각각 만난다. 이어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오는 14일은 무역협회를 각각 방문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행보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부터 경제계와 소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며 이호승 실장의 경제계와 소통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수석이 이날 일일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이행 문제에서부터 규제완화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이 수석

이 경제계와 소통 행보를 시작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경제단체를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 방식을 택했다”며 “이번 경제계와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경제단체 주관 초청 간담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앞으로 기업 애로를 듣고,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각 기업과도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산림청·aT

동남아에 K-임산물 수출  
‘쇼피’ 입점업체 15곳 모집

산림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 (쇼피)에 입점할 임산물 가공식품 업체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

aT는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5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플레이스 입점을 위한 사전 기본교육 비용 전액 ▲참가업체별 상품 관리 및 매출 증진을 위한 전략 컨설팅 비용 전액 ▲업체별 한도 300만원 이내 키워드 광고 등 유료 프로모션 수행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aT와 산림청은 구간 K-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시장(아마존) 및 중국시장(알리바바) 온라인물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쇼피) 진출을 위해 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는 인구 50%가 30세 이하로 젊은 세대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소비자의 88%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100만원 바우처

농식품부, 12일~30일 신청접수  
다음달 14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12일~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받겠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30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요건심사 후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전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다. 이들 5개 분야 종사 농가나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

급한 증명서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 이후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업종은 카드 수령시 안내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14일~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상 유사 재난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